

2003년 5월 11일 시행 행자부 9급 행정학 기출 문제

※ 2003년 행정자치부 시행 최종문제에 대한 견해 제시

첫째, 출제배경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답을 제시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학은 가치판단적인 학문으로써 여러 학설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답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2003년 시행된 행정고시, 입법고시 행정학 문제도 2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사례에 비추어 이번 시험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인정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초래되는 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험 강평>

- ▶ 전년도에 비해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
- ▶ 문제구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출제
- ▶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확정될 우려가 있는 문제가 출제
- ▶ 깊이 사고한 수험생에게는 혼란만 가중되고 보이는 대로 체크한 수험생은 고득점이 우려 됨

1. 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NGO간의 연대 강화
- ②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 ③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
- ④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해설, 정답 ③. 다소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①의 경우, 효율적인 행정통제나 참여를 통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목적이 유사한 NGO간에 갈등, 할거주의 보다는 연대를 통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예로써 세계NGO가 연합하여 G8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②의 경우, 자발적인 결사체이므로 대표성을 확보하기란 곤란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예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종교단체가(불교, 천주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④의 경우, 재정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어용단체로부터 탈피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감시가 가능하다. ③의 경우, NGO는 정부와 동반자적 관계나 갈등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NGO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집단의 반발해소나 NGO에 대한 실체 인정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요인을 전제조건으로 보기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2002, 행시 2차 문제, 2000, 행자부 9급, 맥행정학, P.730, PP.760-761)

2. 신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뢰는 1960년대부터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국가자산이며 국력의 중요요소로 인

② F. Fukuyama는 신뢰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부패문제가 초래하는 해악은 국가 전반에 걸친 신뢰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④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NGO, 제3섹터 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다.

3. 쓰레기통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설, 정답 ②. 출제빈도가 높은 기출문제이다 ㉠노르웨이, 미국학자들인 M. Cohen과 J. March 등이 연구하였다.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모형으로써 조직화된 혼란상태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이론이다.㉢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라는 4가지 구성요소가 표류하다가 우연히 한곳에서(쓰레기통) 모두 모여지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대학교나 연구소에 적합한 모형이다. ②는 Kingdon이 쓰레기통모형을 다소 변형시켜 전개한 흐름.창모형이나 점증모형의 특징이다(패스넷, P. 209)

5. 다음 사례는 어느 재화이기 때문에 야기되었는가?

해양수산부가 2006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오염 예방 차원에서 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낚시면허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낚시면허제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필수적이나 낚시 애호가들의 낚시를 즐길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기에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된다.

- ① 공공재 ② 공유재
③ 요금재 ④ 시장재

해설, 정답 ②. 재화의 구분과 관련(외부비경제효과 해결) 해저의 물고기(도다리, 우럭, 광어), 개울가의 수석은 공유재로서 비배제성, 분할성의 특성을 가짐(맥행정학, PP. 42-44, 단기특강, 2003년 입법고시)

6. V.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
- ② 동기 유발에 대한 과정이론이다.
- ③ 유의성이란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 ④ 직원의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이외에도, 특성(traits), 역할인지(role perceptions)의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해설, 정답 ④ . ④번은 포터와 로울러의 업적 -만족이론과 관련된다. 일명, 유인가(V), 수단성(I), 기대(E)이론이라 말한다.(맥행정학, P. 308 : 패스넷, P. 207)

7.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행정에 있어 정보공유는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 ② 정보공유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간 대리인문제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에 있다.
- ③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 ④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개혁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간 정보공유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①④. 다소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정보의 소유란 산업사회에서 특정계층만이(특히, 고객이 아닌 기관) 정보의 소유를 통한 계층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전자정부)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소유가 아닌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의 공유란 기관간 또는 기관과 고객사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우선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과 민주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①의 경우 정보공유의 목적을 민주성으로 간주(단, 생산성과 민주성 중지를 위한다면

정확한 정답이 된다. 주로라는 용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음). ②의 경우 민주성. ③의 경우 민주성. ④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1990년대 행정개혁시 도입한 예산제도는 산출 예산제도로써 성과중심, 공급자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예산제도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궁극적인 목적은 투입, 과정, 절차가 아니라 결과, 성과, 산출중심. 이때는 민주성보다 생산성 중시) 출제자의 의도가 민주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문맥상 ④번이 정답과 유사. 하지만 행정혁신에 목적을 둔다면 ①번이 정답이 될 개연성이 높다. (패스넷, P.549. 전자정부, 가상조직 복사물 참조)

8.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적 통합과 공간적 통합을 추구한다.
- ② 조직 전체의 구조가 비계서적이며, 중심-주변형 또는 군집형이다.
- ③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낮다.
- ④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 분산적이다.

해설, 정답 ③. 미래지식행정 모형으로써 최근에 강조한 이론으로서 탈관료제조직 (Adhocracy Org. 연성화조직)과 유사하다. 분화나 분리는 과학적 관리법이나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중시하였다. 과정적 자율성은 높다. (맥행정학, P. 458, 2003 서울시 승진, 단기특강자료에서 그대로 출제)

9.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 ② 법적 규정과 지침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 ③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기 위해
- ④ 현대 행정 문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해설 정답 ①. ①번은 재량행위 축소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구현(패스넷, P. 129에서 그대로 출제, 1998, 행자부, 7급 : 단기특강에서 그대로 출제)

10.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임자의 적응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②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고위 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해설, 정답 ④ 정규공무원이 아니며 신분보장이 약하다(패스넷, P.401)

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보공개제도
-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 ③ 공청회 등 주민참여
- ④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정답 ④. 매년 출제되는 분야이다(2000, 행자부 9급, 2002년 울산시 9급, 페스넷, P. 612)

12.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와 같은 행정개혁적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 ②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③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④ 배타적인 국가지배체제 대신에 네트워크체제나 파트너십이 공동체운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설, 정답 ③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대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2003년 행시문제와 유사함, 단기특강자료에서 출제)

13. 고객지향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마케팅지향적 방식 ② 기획의 중시
- ③ 단일화의 지향 ④ 경쟁의 포괄성

해설, 정답 ③.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정보화 사회와 관련하여 대두. 행정서식은 표준화, 행정서비스는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참고로, 영국의 시민헌장제도(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서비스 및 그 이행표준화)는 서비스 기준의 구체화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페스넷, P. 628, 단기특강자료에서 출제)

14.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 ③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P. Samuelson)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④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 ① 대표자없는 곳에 과세없다
- ②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행정부의 재량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통제방안으로써 입법부예산원칙에서 중요시
- ③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빅셀(K. Wicksell)의 견해
- ④ NGO의 예산감시도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우리의 경우 밑빠진 독상제정). 대표적인 예로 기금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2002. 3. 1시행), (기금 설명시 다름)

15. 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②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
- ③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 ④ 소외계층의 이익반영에 기여

해설, 정답 ②.

다소 논란이 생길수 있는 문제이다.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출제자의 진의로 볼 때 참여는 능률성보다 민주성에 역점을 두므로 ②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 ㉠ 시민참여는 정책결정과 집행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 ㉡ 결정단계는 시간이나 비용의 과다, 결정의 지연성,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갈등초래,
- ㉢ 집행단계는 신속성, 집행의 순응, 집행비용의 과소
- ㉣ 시민은 공무원에 비해 비전문가이므로 결정단계에서 능률성, 전문성 저해,
- ㉤ 공동참여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이나 책임성 약화
- ㉥ 시민참여(공동생산, 제 3 섹터방식, 민영화)는 오히려 행정의 책임성 약화초래 (출처 :1998 국가5급승진, 단기특강, 제 1 회, 3번 문제, 패스넷 행정학, P. 590 참조)

1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제도이다.
- ②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다른 부처와 인사 교류도 가능하다.
- ③ 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갖는다.
- ④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된다.

해설, 정답 ③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다. (2003 입법고시, 2002 서울시기출문제, 단기특강에서 그대로 출제, 자세한 내용은 패스넷행정학, P. 623. 맥행정학,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참조, PP. 758-760)

17. 총제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나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과는 거리가 멀다
-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 ③ 고객이 품질을 주도하도록 한다
- ④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하며, 계획과 문제 해결에 있어 집단적인 노력도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①. MBO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 장기적이고 품질개선 강조, 고객 중심, 혁신의 기법으로써 과학적이며 통계적인 기법이 요구된다.(패스넷, P. 383, 2002, 경기도 9급, 단기특강에서 출제)

18. 행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해진 재정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통제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예산의 이체와 이월 ②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③ 정원 및 보수의 통제

④ 기록 및 보고제도

해설, 정답 ①. 예산집행의 통제방안과 신축성 유지방안을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이다
(패스넷, P. 566, 단기특강에서 출제)

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배치전환

② 대우공무원제

③ 필수실무요원제

④ 복수직급제

해설, 정답 ①. 배치전환은 (전직·전보) 동일직급내의 인사이동으로 승진개념이 아니다.

㉠ 대우공무원제도 :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 사유가 없을 때 상위 직급을 대우하는 제도이다.

㉡ 필수실무요원 : 근무수행이 우수할 경우, 6급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제도

㉢ 복수직급제 : 동일 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다.(패스넷행정학, PP.437- 438에서 그대로 출제)

20. 미국식 신공공관리를 통한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거 권력지향적 통치를 대신하여 시장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을 지향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성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정부를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②. 매년 출제되는 기출문제임, 과정보다는 결과중시. (패스넷, P, 612, 99년 행자부 9급, 단기특강,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참조)